

자료제공: 2023. 11. 15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

이준형

2133-6205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신문팀장

천세은

2133-6207

### 오세훈 시장, 뉴시티 특위 만나 "특별법에 큰 틀의 원칙 담겨야"

- 11.15.(수) 국민의힘 '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'와 인접도시 통합 면담
- 특위 조경태 위원장 "서울시도 특별법에 관심갖고 수시로 논의해 주길 당부"
- 성공적 통합위해 특별법에 보조금관리법 개정·자치시 편입방안 등 검토 필요
- 오 시장 "특별법에 큰 틀 원칙 담겨야... 서울·수도권 시민 동의 최우선 전제"

□ 오세훈 시장은 11.15.(수)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'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(이하 뉴시티 특위)'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이번 논의는 지난 6일(월) 김병수 김포시장, 13일(월)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으로 지난달 '메가시티 서울'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.

□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, 이인화 위원,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. 조경태 위원장은 "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'서울'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"이라며 "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"고 밝혔다.

- 이에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,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‘뉴시티 특위’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 또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.
- 앞서 김포시장, 구리시장과의 만남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통합을 희망하는 도시와 서울 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하며, 통합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.
-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‘특별법 제정’에 이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,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.
-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‘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’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,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~30%p 낮게 적용받게 된다.
- 또 ‘경기도 산하 시장’이 ‘서울시 구청장’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‘자치구(自治區)’가 아닌 ‘자치시(自治市)’로 편입, 행정·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~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‘서울시 자치구(自治區)’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.
- 이를 위해서는 「지방자치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수도권 정비계획법」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‘특별법’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.

- 오 시장은 “어제 국회를 방문해 당부드렸듯이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·영향을 고려하여 ‘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’이 담겨야 한다”며 “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만이 ‘특별법 제정’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